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1.13(금) ~ 2023.01.20(목)

제공일시 2023 01 27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산업통상자원부 kpc 한국생산성본부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1.13(금) ~ 2023.01.20(목)

제공일시 2023 01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친환경산업 유출 막을 '탄소중립법' 만든다…美IRA 응수

(연합뉴스, 2023.01.19) 정빛나 기자
(한국경제, 2023.01.19) 김리안 기자
(매일경제, 2023.01.19) 최현재 기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역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탄소중립법' 입안 추진을 공식화했음
- 이는 친환경 산업 관련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EU 내 클린테크 생산시설 확대를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임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제안하겠다며, EU의 반도체법과 동일한 형태로 설계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클린테크 생산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히 이뤄질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 위원장이 탄소중립산업법 입안 시 참고 법령으로 제시한 EU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공공·민간 투자를 통해 확보한 430억유로(약 59조원)를 반도체 생산 확대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임

2. 미 정부, 에너지부에 예산 465억 달러 할당…청정에너지부문 역대 최고 수준

(인더스트리뉴스, 2023.01.17) 권선형 기자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7,000억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음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the Energy, DOE)에 총 465억달러를 할당, DOE 예산이 이전 회계연도 대비 4% 증가했음
- DOE 산하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은 청정자동차 기술, 재생에너지의 그리드 연결,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연구·개발(R&D) 등에 총 34억6,000만달러를 할당받았음
- 이는 이전 회계연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이에 따라 미국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도입 속도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됨

3. FRB, 7월 31일까지 미국 6대 은행으로부터 기후 리스크 분석 요청

(Reuters, 2023.01.18)
Howard Schneider, Ann Saphir 기자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미국 6대 은행에 대해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 관련해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지시했음
- 미 중앙은행은 2050년까지 탄소제로 경제로의 이행으로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기업 대출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을 포함한 시나리오분석을 요청한 것임
- 성명에서 FRB는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리스크를 요구하며,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등에 7월 3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며, 2023년 말쯤 결과의 개요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음

1. 다보스 회의서 EU "녹색산업 지원법 마련, 현금지원"

(Reuters, 2023.01.18) Jan Strupczweski 기자

- EU위원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연합은 녹색산업의 정부지원, 기업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y Fund)'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청정기술과 산업혁신을 위한 EU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이며, 이를 위해 '넷제로 산업법'을 제안하고, 공급망 전체에 걸쳐 전략적인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함
- 그러나 올해 위원회가 승인한 6720억 유로 중 53%가 독일에, 24%가 프랑스에 지원했으며, 이탈리아는 7%를 차지한 것을 보아 이법안의 현실화를 위해 EU 지원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도 있음
- 주권기금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 기금은 아직 독일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EU위원회는 더 빨리 움직이는 중간 자금 풀(브릿지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함

2. 말레이시아와 EU의 팜유 수출 갈등 고조

(Reuters, 2023.01.16) Mei MEi Chu 기자

- 세계 2위 팜유 생산국인 말레이시아가 유럽연합의 삼림벌채 관련 법령 강화로 식용유에 대한 추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자 팜유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 양쪽은 수년째 수입 제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EU의 삼림벌채 규정은 2030년까지 팜유 기반의 수송(운송)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EU의 재생에너지지침에 가세하고 있으며, 식품오염물질인 3-MCPD 에스테르에 대해 콩, 유채, 해바라기 등의 작물에서 추출된 연질유(soft oils)과 비교해 팜유에 대한 안전제한을 강화했음
- 그러자 세계 팜유수출의 85%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지침에 대해 WTO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22년 팜유의 말레이시아 수출액 중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9.4%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2015년에 비하면 40%나 급감했음

3. WSJ "반도체는 새로운 석유…美, 공급망 재편 올인"

(아시아경제, 2023.01.16) 권해영 기자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자료를 인용, 미국이 '뉴 오일(New Oil)'인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나섰다고 전했음
-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생산 능력은 이전만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공급망 확보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음
- 보스턴컨설팅그룹(BSG)과 SIA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20년 12%로 하락한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0%에서 15%로 올라갔고, 대만과 한국의 점유율은 각각 20%를 넘어섰음
- WSJ는 앞으로 반도체가 과거 석유만큼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칩4 동맹' 등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음

1. EU 탄소국경세 비상에…정부, 온실가스 감축 체계 개편

(매일경제, 2023.01.15) 이희조 기자
(서울신문, 2023.01.13) 박승기 기자

-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국내 기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음
-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CBAM 관련 기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올해 상반기 중으로 CBAM 대상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기반을 마련,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검증 결과가 EU에서 중복 검증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힘
- 또,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CBAM 관련 기업 문의 사항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고 민관 공동 수출 지원 협의체인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킬 예정임
- 이에 더해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방침임

2. 환경부, 韓기업 ESG 경영 강화에 1067억 지원…3.7조원 융자지원도

(뉴스1, 2023.01.18) 임용우 기자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는 기업의 'ESG'을 돕기 위해 올해 총 1067억원의 직접 지원사업과 함께,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음
- 직접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업체의 ESG 경영을 위해 자문을 지원하고, 환경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과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으로, 전년보다 70% 늘어난 438억원이 편성됐음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은 전년보다 303억원이 증액된 90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음 융자 지원사업은 친환경 설비투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미래환경육성융자 등으로 구성됐음
- 또 친환경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500억원 증액된 1000억원이 편성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축 공정·플랜트 등 시설·운영 비용에 필요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자금도 전년보다 100억원 늘어난 243억원이 마련됐음

3. 기후변화 싱크탱크 만든다

(매일경제, 2023.01.17) 박동환 기자

-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총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가 기후변화 이슈를 지원하는 싱크탱크 신설을 추진함
- 17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탄중위는 지난해 말 '한국판 IPCC(K-IPCC) 설립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 최근 연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음
- 탄중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을 참고해 탄중위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음
- 지금도 한국환경연구원을 간사기관으로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1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NRC탄소중립연구단이 존재하지만 이를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싱크탱크로 보기에는 체계성과 유기성이 부족하기 때문임

1. LG엔솔, 혼다와 美 배터리 합작법인…“연 전기차 50만대 분”

(머니투데이, 2023.01.13) 김성은 기자
(동아일보, 2023.01.13) 김민범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는 13일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L-H Battery Company, Inc(가칭)’을 공식 설립하여 한국 배터리 업체와 일본 완성차 업체의 첫 전략적 협력 사례를 만들었음
- 양사는 지난해 8월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해 배터리 공장을 설립키로 합의했는데,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임
- L-H Battery Company는 다음달 신규 공장 착공을 시작해 2024년 말 완공, 2025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며, 신규 공장은 미국 오하이오 주 제퍼슨빌 인근에 건설될 예정임
- 양사는 신규 공장에 총 44억달러를 투자, 40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능력(순수 전기차 50만대 규모)을 갖추기로 했으며,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생산된 배터리는 북미 혼다 공장에 독점적으로 공급될 예정임

2. SK, UAE와 탄소중립 협력..아시아 특화 민간 배출권 시장 구축한다

(머니투데이, 2023.01.17) 우경희 기자

- SK그룹이 UAE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음
- 최태원 회장과 칼둔 알 무바락 대표는 이날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감축인증 방법론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일 방안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양측은 워킹그룹 협의체를 구성해 이 부분을 중점 논의했음
- SK는 2021년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설립했고, 무바달라는 2019년 설립된 탄소배출권 거래서비스기업 에어카본 익스체인지(ACX)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3. GS칼텍스, 플라스틱 재활용 ‘전환점’ 만든다

(뉴시스, 2023.01.18) 김래현 기자

-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에 적극 투자하는 GS칼텍스가 주목받고 있음
- GS칼텍스는 LG화학과 2021년 공동 개발 협약(JDA)을 맺었고, 올해 바이오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3HP 시제품 생산에 돌입할 계획을 통해 선제적인 바이오 플라스틱 생태계 구축에 나섰음
- 3HP는 개인 위생용품부터 전기차 경량화 소재까지 적용 분야가 다양해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물질으로, 상업화를 통해 생분해성 소재를 비롯한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힘
- 또 GS칼텍스는 열분해유를 이용해 자원 순환형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실증사업에도 돌입했으며, 실증사업 결과가 나온 뒤에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5만t 규모의 폐플라스틱 생산설비 투자도 모색할 예정임

유럽의회, 종이 · 산업 등 폐기물 수출 전면 금지하고 불법 폐기물 운송 검사 수행한다

(임팩트온, 2023.1.20) 홍명표 기자

- 유럽의회가 폐기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유랙티브와 에디(edie)가 18일(현지시각) 전함. 유럽의회는 국제적으로 폐기물 범죄를 줄이기 위한 모든 폐기물 처리 금지를 포함하여 폐기물 운송에 대한 더 엄격한 절차와 통제 조치를 도입하는 새로운 법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짐
- EU의 폐기물 운송 규정에 대한 의회 보고서는 17일 투표한 결과, 찬성 594표, 반대 5표, 기권 43표로 대다수로 채택됨. 이 법은 이제 최종 채택 단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올해 말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간의 협상이 예정되어 있음
- OECD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교환되는 폐기물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억8200만톤이 거래됨.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20년에 3270만톤의 폐기물이 비유럽연합 국가들에게 130억유로(약 17조원) 어치가 수출되어 2004년 이후 75%나 증가함 반면, 비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의 폐기물 수입은 2004년 이후 10% 감소해서 2020년에는 1600만톤에 달함
- 2020년 EU로부터의 철금속 폐기물(철, 철강) 수출량은 1740만톤으로 전체 폐기물 수출량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하고 있음. 주요 목적지는 튀르키예로, 1180만톤에 달함. 튀르키예는 EU로부터 수출된 철금속 폐기물의 3분의 2(68%) 이상을, EU는 410만톤의 철금속 폐기물을 수입했으며, 그 중 3분의 1(32%)은 영국에서 수입됨.
- 비록 훨씬 낮은 수준이었지만, 상당한 양의 종이 폐기물도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출됨. 610만톤의 수출은 2020년 EU 폐기물 수출의 거의 5분의 1(19%)을 차지함. 이 중 160만 톤(26%)은 인도로, 120만톤(20%)은 인도네시아로, 90만톤(15%)은 튀르키예로 수출될 예정이었음
- 폐기물 운송은 목적지 국가에서 심각한 환경 및 건강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EU의 재활용 산업에서 1차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자원을 박탈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제한적이고 정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EU 내에서 처리될 예정인 모든 폐기물의 운송 금지를 지지하기로 투표한 것임
-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 출신인 퍼르닐 바이스의 보고서는 다른 정치 단체들 사이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얻었음. 또한 유럽의회는 제안서에서 EU 위험 기반 표적화 메커니즘의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 운송을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하기로 함
- 플라스틱은 또한 제안된 규정에서 다루어지는데, 비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OECD 국가로의 수출은 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중단되어야 함. 전체 토론에서, EU 환경위원 비르지니우스 신케비지우스(Virginijus Sinkevizius)는 "폐기물 밀매를 단속할 것을 약속하고 위원회가 EU의 부정행위방지사무소(OLAF)의 지원을 받아 회원국의 조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확신함
- 유럽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의 양은 유럽연합의 발전량 감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함. "폐기물 소유자들이 항상 일관된 방식으로 폐기물을 위험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님. 위험 폐기물은 회원국마다 다르게 분류된다"고 16일 기자들에게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는 동안 EU의 한 고위 감사가 설명함
- 한편, 유럽 감사원은 "폐기물을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와 불법적인 지름길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선 유해 폐기물이 생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함.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EU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EU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위험 폐기물은 전용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유해 폐기물의 79%만이 그렇게 처리되어 21%라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EU 고위 감사관은 "이 격차는 불가리아와 그리스와 같은 일부 회원국의 경우 약 1%이며,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와 같은 다른 국가의 경우 50% 이상으로 다양함. 그리고 이러한 격차의 일부는 위험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지만, 데이터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함